

집권 3년, 노무현 정권은 어디로 가나

김동춘

신년 들어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고 지난해 말부터 개혁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하자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모양이다. 싸움을 벌이겠다는 사람보다는 화해를 하자는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데 환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정책노선, 인사방식을 철저하게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는 30%를 넘어서기 어려운 것은 물론, 무원칙한 화해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가 자신의 임기는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다할 업적을 남길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작년에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한 신행정수도 건설 방침이나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의 강행 드라이브가 반드시 역사적으로 정당한지,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한 과제를 개혁의제로 삼은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추진의 진정성, 그리고 추진방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실제 2003년 초 취임 때부터 2004년 4·15 총선 이전까지 이 정권의 핵심 관련자들은 보수언론이나 다수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먹겠다고 하소연했고, 상당수의 노무현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사태와 4·15 총선으로 열린우리당은 다수당이 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유주의 세력이 대

통령과 의회를 동시 장악하게 되었다. 즉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오랜 세월 민주화운동 세력이 꿈꾸어온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 거야말로 실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정권은 역사상 실로 중차대한 임무를 갖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4·15 총선 이후 8개월 동안 이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 이라크 파병을 한 오점을 남겼으며, 부동산 상승세를 꺾어놓은 것 정도 외에 제대로 된 개혁적인 입법과 제도를 정착시킨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좌절된 것은 현재의 무리한 판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그렇게 요란하게 시작한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그리고 최근의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문은 또 어떠한가?

대통령직과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권과도 달리 집권 과정에서 구보수세력과 어떤 타협을 하거나 후원을 얻은 것 때문에 특별히 빚을 갚을 일도 없는데도 왜 이 정권은 이렇게 죽을 쑤는가? 결국 우리는 언론과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정부 관련자들의 4·15 총선 이전의 하소연은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위기에 처한 수구보수 세력의 입지를 대변하고 있는 보수언론의 만지결기가 이 정권으로서는 대단히 짜증스러운 것이고,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의 반대론 때문에 속이 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수구보수 세력치고 자신의 입지와 기득권이 상실될 위기에서 이 정도의 반대를 하지 않겠는가? 친일, 친미, 친자본, 부패로 얼룩진 한국의 우파들의 도덕적 정당성이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수세력의 억지와 만지결기는 어느 역사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악의적인 공격은 사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야 한다. 군사독재의 적자인 그들이 언제 게임의 룰을 지킨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언제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동원한 적이 있었는가? 그들

이 막무가내로 반대한다는 것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국민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알려서 그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개혁'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칼자루는 분명히 이 정권이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언론과 야당에게 돌리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결국 나라를 이끌기 위한 일관된 철학과 가용한 세력의 조직화이며 만약 미비하다면 그것을 갖추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라는 점으로 귀착된다.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확립과 힘의 조직화, 개혁의 청사진 제시 그리고 지지세력의 동원,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과 전술의 구사 등 모든 점에서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우리는 지난 연말 통과시킨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실패한 '4대 개혁법안'의 좌절에서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사실 '4대 개혁법안'이라는 명칭은 언론이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세트료 묶어서 처리하려한 것은 여당이였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학법, 언론법, 이 4개의 개혁안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연내에 통과를 강행하려는 전략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실패가 예상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미 현 정권 탄생 이전부터 제기되어오던 사안이기는 하나 지난 50년의 냉전과 군부독재를 지탱해온 질서의 청산과 직결되어 있는 이 법들을 일거에 통과시키려 한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였기 때문이다.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역량은 별개의 문제고 적절한 시간계획과 주체적 역량 동원 점검과 국민적 설득을 수반하지 않는 당위론적인 문제의식과 강행의지는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는 한나라당을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4대 법안'에 포함된 개별적 이슈는 하나하나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고, 수구보수 세력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고양이와 쥐가 힘아무리 강해도 독 안에 든 쥐를 그냥 잡아먹을 수는 없다. 궁지에 몰린 고양이

가 쥐에게 역공을 가한다면 고양이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당의 최대의 오류는 이 사안들을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칼집에 넣어두었다가 꺼낸 것이 아니라 마치 길 가다가 주운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에 있다. 즉 대통령 당선 직후 혹은 4·15 총선 직후에 이러한 청사진을 밝히고, 그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작업에 들어갔다면 이러한 정치적 공격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은 대통령이 MBC와의 회견에서 불쑥 제기하였으며, 포괄적 과거청산의 필요성과 의지는 8·15 기념식장에서 갑자기 발표하였다. 언론개혁 문제 역시 여기 서기서 보수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물론 이 모든 사안들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제기되는 방식이었다. 즉 이 법안들이 창당 당시의 여당의 정책안으로서 미리 국민들에게 공포된 이후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입법안이 제출되거나 대통령의 국정 계획의 형태로 분명하고 질서 있게 제기되지 않음으로서, 설사 대통령 자신은 애초부터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 간의 의견교환과 상호 충분한 교감을 갖고서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세력 동원 작업 역시 대단히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 의장, 총리 등 관련자들의 계속되는 말실수 혹은 야당과 국민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언들은 이 작업이 역사적 대의를 가지고 추진되는 개혁과제가 아니라 현 정치권의 입지강화와 야당을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인상을 주었다. 예를 들면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권위주의 정권, 전쟁에서 억울하게 피해 당한 국민의 고통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박정희 친일경력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자 또 야당에서는 발끈하여 용공세력을 조사하자고 맞불을 놓음으로써 이 사안은 국민의 요구에 호응하는 논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단순한 정쟁으로 비

화됨과 동시에 야당과 보수세력을 단결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념논쟁으로 증폭되고 국민들은 이것이 박근혜 죽이기 혹은 한나라당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 대의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이 여당의 정략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갖게 되었으며,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신의 경제적 처지의 향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갖고서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념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도 이념을 견지하고, 개혁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내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큰 정치다. 그러나 이 정권은 너무나도 말은 많이 했지만 뒷심은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청산, 언론개혁,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왜 그것이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법안은 이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개혁, 사회개혁의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과 비중을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가 결여된 상태, 여당에서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용보다는 통과 자체에 비중을 두었으며, 또 스스로 설정한 일정에 맞추어 통과시키려 하다보니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결국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부딪쳐 신문법 하나 누더기로 통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결국 새해 들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남북대결 구조와 냉전체계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 전술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자체는 사실 자유주의적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의 좌우대립과 냉전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 사안은 경제, 복지 등 이해관계적 사안보다도 훨씬 더 타협이 어려

운 사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보안법, 과거청산, 언론개혁 등은 민주화운동 세력과 이 정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남북화해 문제에 역점을 두었듯이 민주화, 인권 관련 사안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국가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사안인 것은 사실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오늘 한국은 1980년대 말 혹은 1990년대 초의 한국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부패척결, 군부세력 청산 등으로 엄청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었던 김영삼 정권 초기의 열기를 다시 맛볼 수 없는 시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 사회는 이미 민주화 이행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 정권은 군부독재 종식기의 초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는 시점에 집권을 한 것이다. 더구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미진한 민주화, 인권신장의 과제와 더불어 대단히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제는 과거의 의제처럼 단순하게 접근될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없는 사안들이다.

결국 이 문제는 역량의 문제 이전에 현 대통령과 이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열린우리당 그리고 여러 핵심 인사들이 갖고 있는 '개혁'에 대한 인식의 한계에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개혁과제는 일반민주주의적인 것과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냉전질서를 청산하고 법 제도 상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자유주의 성격의 일반민주주의적인 개혁과 그동안의 개발독재, 재벌독점 체제 하에서 형성된 과도한 시장주의와 낮은 복지를 교정하고, 미약한 공공영역을 확대시키려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개발독재와 관료지배 하에서 형성된 부패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시장주의적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제는 1998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우리의 의지나 일정과 무관하게 강제된 점이 있

었고, 미국을 본거지로 하는 다국적 기업과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신용평가 회사는 그러한 시장주의를 곧 개혁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논리를 확산시켰고, 한국의 경제관료나 지식인들도 그러한 공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이 있다.

즉 그들이 한국의 경제개방과 노동조합의 영향력 제한을 의도하면서 제기한 탈규제, 민영화 등의 '시장주의 개혁' 과 우리가 그동안의 개발독재와 관료주의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기업의 투명성 강화는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분명히 전자는 국외자본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한국 사회가 내재적으로 추진해야할 개혁의 과제와는 괴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서 바로 이런 지점에서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외국자본과 경제관료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개혁은 오직 정치민주주의, 인권 등의 사안에만 제한되고 실제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회·경제 영역에서의 정책 내용은 전형적인 친재벌,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기업도시법 제정, 증권 집단소송 3년 유예 움직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합법화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견 전 업종의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 관련법안, 실용주의를 강조한 친재벌적인 각종의 조치들이 그것이다.

이 정권은 우파들로부터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좌익 정권' 이라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폈다. 2002년부터 일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 붐 역시 그 씨앗은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는 그것을 막기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즉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이 실제로는 서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책들을 추진한 셈이다. 그래서 일반 민주주의의 개혁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얻은 중간층의 지지를 사회·경제 영역에서의 '정책의 부재(아니 경제관료들에게 모든 정책의 주도권을 넘겨줌으로서)' 로 다 까먹고 말았다.

물론 이 정권이 경제·복지 문제를 처음부터 다잡고 들어가서 재벌, 건설업자, 외국자본의 심기를 건드리고서라도 우파들이 공격하듯이 실제로 분배위주, 시장주의를 교정하는 정책을 폈더라면, 자본의 강력한 스트라이크에 직면해서 정권 자체가 지탱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사태의 본질이라도 이해를 하고, 필요한 선에서 타협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양측에서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을 내리려면 미국식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작동 가능한 자본주의로 알고 있는 대다수의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 정부는 이에 대한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경제는 그 사람들 손에 내맡긴 것이다.

물론 노동당이 집권한 브라질조차 세계화의 추세에 편승하고 외국자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극우 강경과 부시가 지배하는 미국과 세계질서 하에서 자본시장, 서비스 시장 개방이 거의 불가피하다. 더구나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이 미국과 다국적 자본의 요구를 무시하고 규제완화, 개방의 길을 거꾸로 가는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 최저임금제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보육시설 확충 등 노동·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극히 취약한 보호장치 마련 작업, 공교육 확충과 대학 개혁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작업은 그러한 조건과는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작했어야 했다. 성장주의의 신화를 걷어내고 형평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하고,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 정권의 과제로 설정되었어야 했다. 확고한 원칙과 방향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지켜내기 힘든데, 아예 생각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무원칙한 경제살리기 입론에 굴복하는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양

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회·경제주체의 협약을 제안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한번 '구호'가 나온 느낌이다.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아 보다 일관된 철학과 방향, 그것을 위한 역량의 동원과 육성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장차 어떻게 될까? 그것은 보나마나 차기 대권주자의 등장과 조기 대선국면 진입일 것이고, 이익집단의 무차별적인 요구에 무원칙하게 항복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은 정치적으로 중요사안이기도 하나 우리 사회의 과제는 이미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그런데도 인사문제에서는 아직도 지역안배를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결국 호남표를 다지고 영남에 세력을 확대하는 일을 여전히 모든 정치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우리 정치와 사회의 과제는 더 이상 분단극복, 지역주의 극복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제 1980년대의 시계를 벗어 던져야 한다. 주관적 순수성과 청렴성만으로 대중들의 감동을 얻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아직도 이 정권은 3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야 교체된다. 많은 이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했듯이 노 정권의 집권에 경악을 한 보수세력만 이 정권이 언제 끝날까 날짜를 꼽으면서 한숨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노 정권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당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정당, 이념과 정책으로 무장된 정치집단, 그리고 전문가의 조직화 없이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구호에서 머무르고 말 것이다. 이 정권이 결국 그 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몇 사람을 권력권에 진입시켜준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 국민은 얼마나 불행한가? **김대비평**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저서에 『1960년대의 사회운동』 『한국사회노동자연구』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사회』 『전쟁과 사회』 등이 있다. dckim@mail.skhu.ac.kr